

전북형 '다층적 돌봄 안전망' 구축 필요

도, 내년 3월 통합돌봄 전면시행... 국가돌봄과 연계·지역돌봄사업 통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필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전북형 돌봄정책'의 구상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4일 이주보대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전북형 돌봄 정책 방향과 과제'를 통해 전북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가 높고 농어촌 지역은 부족한 보건복지인프라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제공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북형 돌봄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형 돌봄 추진방안으로 △국가정

책과 연계한 돌봄 안전망 구축 △고립 청년과 1인 가구, 소외 장애인 등 신 돌봄 수요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돌봄 필요도에 따른 모든 도민 대상 포괄적 돌봄 제공 기반 조성 등 다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형 다층적 돌봄 체계는 취약계층 중심의 국가주도 '기본돌봄'과 기존 돌봄서비스의 유기적 통합과 연계에 기반한 '보충적 돌봄' 그리고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수요에 대응한 '특별돌봄'으로 세분화한다.

특히 보충적 돌봄과 특별돌봄단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구와 함께

'기존 돌봄서비스의 총괄조정'과 통합 돌봄제공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돌봄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민관 돌봄협력체' 등을 내실있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가돌봄과 보충돌봄에서 누락된 지역주민의 돌봄수요를 수렴할 수 있는 특별돌봄을 신설해 모든 도민이 돌봄의 공백없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북형 돌봄대상을 노인과 장애인 중심에서 영유아, 청년, 장애인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하여 보편 돌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국가돌봄 체계에서 배제됐거나 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수요를 추가로 발굴해 모든 도민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층적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형 돌봄은 기존 요양이나 보호 중심의 단순한 돌봄에서 주거지원, 식사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의료지원, 그리고 긴급지원 등이 돌봄유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민원 처리 우수직원 시상 및 간담회'에 김민영 도지사가 시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신속한 민원 처리 우수직원 3명 시상

최우수상 김지영·우수상 홍연아·장려상 김대연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4일 '2025년 하반기 민원 처리 우수직원 시상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하고 성실한 민원 업무 수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에 사료성분 등록 및 변경 업무를 맡은 축산과 김지영 주무관 △우수상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업무를 담당한 자치행정과 홍연아 주무관 △장려상에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업무를 맡은 행정정보과 김대연 주무관 등 총 3명이 선정됐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서류를 기한보다 앞당겨 완료할 경우, 단축 정도와 처리 건수에 따라 점수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처리 속도를 높일수록 마일

리지가 늘어나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유도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반기 실적은 단축률 65.1%, 처리율 98.4%를 기록하는 등 제도를 통해 민원 업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민원 업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민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며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기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도, 올 청년도전 지원 성과평가 '최우수'

노동부 주관... 전국 86개 지자체 성과평가서 선정

노동부 주관... 전국 86개 지자체 성과평가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86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완성도와 취약계층 발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창업이나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절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사업이다.

도는 2023년부터 사회적기업(휴먼인제이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총 37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특히 기존 사업 이수자



2025 전북 청년활동 네트워킹데이 인사하고 있다.

최근 전주 클로스터 호텔에서 '청년 ON : 서로를 잇다-2025 전북 청년활동 네트워킹데이'가 열렸다. 김민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운데)와 청년단체 관계자들이 손

로 구성된 '포래지앤(서포터즈)'을 운영하며 SNS 홍보와 참여 독려를 강화하며 지역 우수 사례를 꼽았다.

북한이탈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연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다"며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

주고 응원해 준 덕분에 취업이라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해 준 노력이 전국 최고 평가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고 머무를 수 있는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내년도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이어가며, 총 364명의 구직단절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 심리상담, 진로 탐색,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주)휴먼인제이앤씨(☎63-272-49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 2026년 새 기준 적용

평가지표 변경 등을 통한 기관경영·사업성과 평가 강화

임기완수서약서 징수·기관장 중도사임 시 성과급 미지급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9월 11일 도의회에 2024년 실적 기반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나' 등급 편중 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평가대상, 평가 기준, 평가 지표, 평가 방법, 보수 체계, 기관장 중도사임 등 6개 분야에 걸쳐 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공공성이 강하고 경영평가성과를 지급하지 않는 군산·남원의료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기관은 조정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평가 대상으로 유지한다.

경영평가 등급은 기존처럼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행정안전부 제안 모델의 평가지표를 대폭 반영해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난이도 평가와 목표치 상황,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다양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는 상위 등급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채용·인사 비리나 중대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근거와 절차도 신설된다. 지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평가 외에도 출연기관 인건비 상승과 기관 간·직급 간 임금격차 심화 문제 해결에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하위직 인상폭을 높이고 상위직은 낮추는 방식의 임금조정을 유도하고, 용역 등을 통해 보수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임금상

승과 수당지급을 방지하고, 타 시·도 대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 건전한 보수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기관장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신규 임명 시 임기완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선출직 출마 등을 이유로 중도 퇴임할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 이로써 기관장의 조기 이탈로 인한 조직 운영 불안에 사전에 차단한다.

전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기관은 도정 핵심사책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라며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관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대설·한파 대비 현장 점검 나서

현장 대응체계 확인 통해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도로 제설 준비 상황과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서며 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날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익산시 모현동의 도로 제설현황과

공로에 위치한 한파쉼터(물막이조경로 등)를 차례로 방문해 제설 자재 비축 현황, 장비 가동 계획,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을 살폈다.

도는 도내 위임국도·지방도·시군도 등 8,338개 노선(총 연장 6,828km)을 대상으로 제설 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며, 제설 인력 1,275명과 장비

3,666대, 제설 자재(염화칼슘·모래 등) 7만 6,206톤을 갖춘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강설 대응을 도모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파쉼터를 지난해 5,438개소에서 올해 5,907개소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거

노인, 거동 불편자 등 39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와 방문 보건 인력을 활용한 집중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난방시설 상태와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운영시간 등을 살펴며 한파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만호 기자

임실군, 전 군민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1인당 20만원... 내년 1월 12일부터 신청접수

임실군이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잠재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되며, 총 51억원(전액 군비)의 예산을 투입해 2만 5,400여 명의 군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11월 30일 기준 임실군

에 주소를 둔 군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현장에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임실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식품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도-바이오진흥원, 전통식품·청년기업 등 체계적 지원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진흥원은 도내 우수 농식품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대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농식품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내 식품기업들은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홍보 역량과 시장 대응 체계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바이오진흥원은 그동안 기업별 상황 진단과 전략 수립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지원과 컨설팅을 병행하며 기업성과 창출 기반을 강화해 왔다.

2026년 농식품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분야와 농식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기업과 2세 경영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청은 바이오진흥원 담당자 이메일(qcnp@jfr.kr)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전통식품 분야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분야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오상근 기자

새만금 동비용변전소 1년 앞당겨 가동

이차전지 기업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 선제적 대응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과 한국전력공사(대표 김동철)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154kV 동비용변전소의 가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가동은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전기가 제때 공급되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현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렸고, 한국전력공사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단축으로 약 1년 앞당겨(2026년 10월 → 2025년 12월) 가동을 완료했다.

동비용변전소는 대용량 전력 수요처 전용 송전선로 8회선(회선당 최대 400MW)과 배전선로 26회선(총 240MW)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인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이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1면에 이어... 민주 이원택 의원,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당대표와 '원팀'

농어촌기본소득의 경우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 확충에 주력해온 가운데 예초 정부안(1700억원) 대비 637억원이 증액되는 데 기여했으며 도내에서는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이 추가 포함되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 정인 이 의원은 또 최근 재생에너지, K-컬처, 퍼지컬 AI, 농생명 분야 등에

총 50개에 사업비 46조3829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전북 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

이처럼 전북 미래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및 농생명 산업 정책, 퍼지컬 AI·첨단 산업 및 디지털 경제, 지역균형발전·국토정책, 재생에너지·지역 산업 전략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과거 농업 중심의 전북이 퍼지컬 AI

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등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지도를 새롭게 그려가게 될 셈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많은 양질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전북의 경제지평을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진행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가운데 21대 국회 등원 첫해인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현역수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권희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